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지하철·버스 운행지연 15분 이상땀 요금환불	워싱턴 D.C.
사회·복지	3	디지털 정보격차 없애는 '디지털 포용' 활동 연장	파리
환경·안전	5	교량 2만 개 안전점검에 드론 활용	미네소타
도시교통	7	지하철 전 노선 '스마트폰 QR코드'로 요금결제	상하이
도시계획·주택	9	5개 지역 임대사업자 대상 '선별적 허가제' 시행	맨체스터
	11	오래 방치된 빈집 5채 집주인 동의 없이 경매	버밍엄
	13	'중저소득자 첫 주택 구매'에 지분공유 방식으로 지원	빅토리아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원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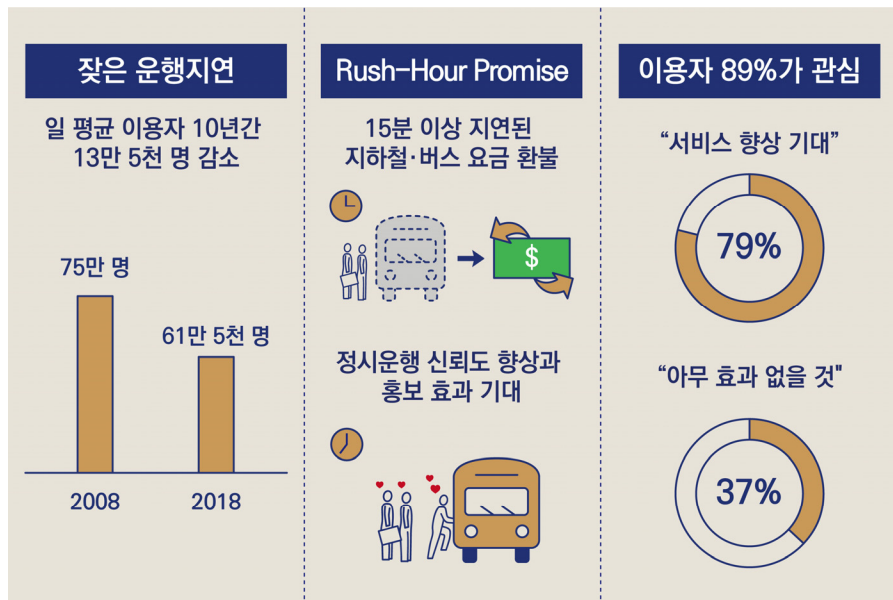
지하철·버스 운행지연 15분 이상엔 요금환불

워싱턴 메트로 운영차량 대상 러시아워에 적용...고객 신뢰도 높이기

미국 워싱턴 D.C. / 도시교통

- 워싱턴 D.C.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공기업 '워싱턴 메트로'(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는 잦은 운행지연으로 지난 10년간 이용자가 13만 5천 명이 줄어들자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목적으로 2018년 1월 26일부터 1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된 지하철·버스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환불해 주는 '러시아워 프로미스'(Rush-Hour Promise) 프로그램을 시행
- 배경
 - 워싱턴 메트로가 운행하는 지하철·버스는 느린 속도와 잦은 운행지연으로 이용자 불만이 증가
 - 최근 워싱턴 메트로의 평일 지하철·버스 이용자 수는 61만 5천 명으로 2008년 75만 명에 견줘 현저히 감소
 - 이용자 감소는 정시운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
 - 전체 이용자 수 감소 원인 중 정시운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아
 - 30분 이상의 운행지연을 경험한 사람은 워싱턴 메τρό를 더는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횟수를 현저히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워싱턴 메트로의 정시운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홍보에 초점
 - 2017년 러시아워 때 지하철과 버스 대부분이 정시 운행되었다는 점을 강조
 - 2017년 7월~10월까지 4개월 동안 평일 러시아워 중 15분 이상 늦은 사례는 전체 운행 건수의 0.5%인 28만 5,296건에 불과
 - 러시아워 때 지하철이나 버스가 예정시간보다 15분 넘게 늦으면 환불
 - 기계결함, 트랙 문제, 경찰수사, 화재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운행이 지연될 때도 포함
 - 계획된 트랙 수리, 극심한 기상현상이 사유인 운행지연은 환불 제외
 - 총 350만 달러(3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지불수단과 교통수단에 따라 다른 환불 절차
 - 교통카드(SmarTrip)를 등록한 이용자
 - 지하철 이용자는 환불 요금이 자동으로 지급
 - 버스 이용자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필수
 - 주간, 월간 정액권 이용자
 - 지하철 이용자는 3달러(3,000원), 버스 이용자는 1달러(1,000원)의 같은 금액으로 환불 적용
- 예상 효과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 89%는 ‘러시아워 프로미스’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응답
 - 79%는 ‘러시아워 프로미스’ 프로그램이 워싱턴 메트로의 서비스가 향상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
 - 41%는 워싱턴 메트로를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37%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trafficandcommuting/in-unprecedented-move-metro-seeks-to-provide-refunds-for-trips-delayed-15-minutes-of-more/2018/01/07/a83fb1bc-f3c2-11e7-beb6-c8d48830c54d_story.html?utm_term=.96c8405fd54b

<https://wtop.com/tracking-metro-24-7/2018/01/metro-board-set-to-approve-refund-policy-for-train-delays>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사회·복지

디지털 정보격차 없애는 ‘디지털 포용’ 활동 연장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지난해 디지털 정보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돕는 ‘디지털 포용’ 활동을 68개 시민단체와 함께 펼쳤고, 올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설치,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디지털 정보격차를 없애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
- 배경
 - 디지털 정보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inclusion numérique) 전략
 - 프랑스어 ‘포용’(inclusion)은 ‘배제’의 반대말로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사용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전략
 - 근본적 목표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사회통합의 지렛대로 삼아 사회 경제적 차별을 없애는 것
 - 시정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의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하려고 시도했지만, 70세 이상의 노인과 저소득층이 겪는 디지털 정보격차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현재도 노인과 저소득층이 겪는 디지털 정보격차는 중요한 문제
 - 디지털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 2017년 1월 25일 ‘디지털 포용을 위한 파리지 전략’ 행사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
 - 공공기관(특히 파리지와 프랑스복지청)과 시민단체 대표자 150여 명이 참여했고, 파리지 홈페이지에서 많은 시민이 생방송으로 시청
 - 실제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토론에 참여
- 주요 내용
 - 디지털 정보격차의 현황을 나타내는 디지털 정보격차 지도를 구축

-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포용 활동과 협력 시민단체가 표시되고, 자원봉사자와 전문가의 교육 및 배치 현황 등이 기록
- 파리시와 협력 시민단체의 목표
 -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과 도구(컴퓨터와 연결망 등)에 접근하고,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 행정민원, 은행업무, 구직신청 등 많은 절차가 온라인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2017년 파리시는 68개 시민단체의 81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현재까지 약 67만 2천 유로(8억 8천만 원)를 지원
 - 2017년 말 시의회는 진행 중인 디지털 포용 활동의 기간을 연장하고 46개 시민단체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디지털 포용을 위한 파리시의 전략’ 포럼을 2017년 6월 29일 개최하고, 세 가지 전략 축을 제시

[표 1] 파리시 디지털 포용 전략의 세 가지 축

파리시 네트워크 내에 디지털 자원을 집중하고 공유	‘디지털 배제’를 겪는 시민과 함께하기	‘디지털 포용’ 전문인력 양성
·국가기관 간 교류 플랫폼 설립 ·미디어센터나 디지털 공공공간 등 시민친화적 네트워크 발전 ·디지털 포용 지도를 발전시켜 관련 시민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 ·시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측정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공동도구를 개발	·공공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노숙인쉼터·공공주택에 무료와이파이 -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시설 확충 ·시민이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원	·행정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행정기관과 시민을 매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비전문인력인 자원봉사자도 함께 양성해 상호 협력을 유도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인력 양성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insertion-emploi-et-formations/inclusion-numerique/un-e-strategie-parisienne-de-l-inclusion-numerique-4549>

<https://www.paris.fr/actualites/la-conseil-de-paris-se-mobilise-pour-l-inclusion-numerique-5303>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환경·안전

교량 2만 개 안전점검에 드론 활용

미국 미네소타주 / 환경·안전

- 미국 미네소타주는 안전 확보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교량 2만 개의 안전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점검에도 드론을 도입할 계획
- 배경
 - 미국 도로·운송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교량 5만 5천 개 이상이 수리나 교체가 필요
 - 교량 점검에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고, 교통통제·차선폐쇄로 안전문제 발생 위험이 존재
 - 가드레일 위로 줄을 내리거나 특수 대형트럭인 ‘스누퍼’(Snooper)를 사용할 때는 회당 최대 100만 달러(10억 원)의 비용이 필요
 - 미네소타주는 2007년 8월 미니애폴리스의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사고로 사망자 13명, 부상자 145명 발생
 - 이후 주정부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파손이 심한 수백 개의 교량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25억 달러(2조 7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
- 주요 내용
 - 2만 개의 교량이 있는 미네소타주는 2015년부터 교량 안전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험 시작
 - 드론을 이용하면 기존 점검비용의 일부만으로 교량 전체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스캔 가능
 - 교각이나 베어링 가까이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이 가능
 - 일반적인 드론과 달리 위아래로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사용
 - 특수 소프트웨어가 수천 장의 이미지를 합성해 3D모델로 변환하면, 엔지니어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점검

- 미네소타 교통국의 엔지니어 사라 손덱(Sarah Sondag)은 드론이 전문가의 심층 검사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드론은 정밀하고 광범위한 점검을 돕는 도구임을 강조
- 주정부는 어느 유형의 구조물에 어떤 유형의 드론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조사하여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점검 방법을 도입할 계획



[그림 1] (위) 대형 트럭 스누퍼를 이용한 교량 점검 모습

[그림 2] (아래) 드론을 활용한 교량의 근접촬영 모습

<https://www.citylab.com/transportation/2018/01/to-care-for-aging-bridges-minnesota-taps-the-power-of-drones/551339>

<https://uavamerica.com/bridge-inspection>

<https://www.uasvision.com/2015/11/30/minnesota-dot-testing-drones-for-bridge-inspections>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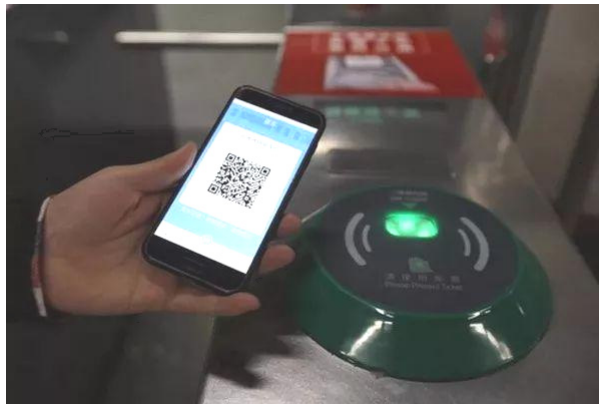
지하철 전 노선 ‘스마트폰 QR코드’로 요금결제

중국 상하이시 / 도시교통

- 중국 상하이시는 기존 교통카드의 분실위험을 줄이고 충전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7년 10월 푸둥 국제공항에서 상하이까지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스마트폰 QR코드’ 요금결제를 2018년 1월 20일부터 지하철 전 노선으로 확대 적용
- 배경
 - 기존 교통카드는 분실위험이 크고, 충전이 불편한 단점이 존재
 -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분실위험도 줄이고, 승객의 탑승정보를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취합 가능
 - 상하이시 지하철은 푸둥 국제공항역에서 지하철 2호선 룡양루(龙养路)역까지 운행하는 고속 자기부상열차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QR코드’ 결제방식을 도입
 - 2018년 1월 20일부터 상하이시 지하철 전 노선에서 QR코드 결제가 가능
- 주요 내용
 - 스마트폰에 ‘Metro大都会’ 앱을 설치하고 지하철역 개찰구에 QR코드를 인식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지하철 요금을 결제 가능
 - 앱을 설치하고 실명인증 후 이용 가능
 - 결제는 ‘은행카드’와 ‘다른 방식’의 두 가지로 가능
 - 현재 은행카드는 ‘유니온페이 카드’, 다른 방식은 ‘알리페이’만 가능
 - 모든 지하철역 개찰구에 입·출구 2개씩의 인식장치를 설치
 - QR코드 인식장치 위로 5cm 이상의 지점에 스마트폰의 화면이 보이게 두면 0.3초 안에 인식
 -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키고 앱에서 QR코드를 띄운 채로 인식
 - 스마트폰이 오프라인 상태에 있어도 결제가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해 적용
 - 영수증은 도착하는 지하철역의 서비스센터에서 발급 가능

- 향후 계획

- QR코드 결제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2018년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QR코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승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
- 결제수단을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 카드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다른 결제수단도 도입할 방침
- 지금은 'Metro大都会' 앱의 실명인증이 중국인만 가능하지만, 2018년 안에 외국인도 실명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그림 1] 개찰구의 QR코드 인식장치와 앱 사용 모습

http://www.dzwww.com/xinwen/shehuixinwen/201801/t20180117_16926365.htm

http://news.ifeng.com/a/20180117/55194449_0.s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590063936250046436&wfr=spider&for=pc>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도시계획·주택

5개 지역 임대사업자 대상 ‘선별적 허가제’ 시행

영국 맨체스터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맨체스터市는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임차인이 입주를 꺼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건물만 임대허가를 내주는 ‘선별적 허가제’(Selecetive Licensing)를 2017년 3월부터 시행

- 개요

- 근본적 목적은 임차인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 문제가 하나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시행
 - 질 낮은 주거환경으로 많은 임차인이 기피하는 지역
 - 임차인이 짧은 기간만 거주하려는 지역
 - 반사회적 행동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
 -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지역
 -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
- 민간 임대시장의 주택관리가 좋아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임차인이 해당 지역을 거주하고 싶은 지역,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
 - 임대주택의 공실률과 공실기간을 줄여 주택 소유주의 임대수익을 증가
 - 주택의 가치와 시장가격을 높임
 -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반사회적 행동을 근절

- 주요 내용

- 해당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벌금 부과
 - 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주택관리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

- 세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부실, 화재발생 위험요인, 위생 문제 등이 발견되면 임대사업자는 이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방면으로 제재
- 2017년 3월 13일 크럼설(Crumpsall) 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
 - 모스 사이드(Moss Side), 러셜롬(Rusholme) 지역은 2017년 10월 2일부터
 - 올드 모트(Old Moat), 모스틴(Moston) 지역은 2018년 4월 23일부터
- 지정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주택임대시장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http://www.manchester.gov.uk/news/article/7892/landlord_licensing_in_operation_in_moston_and_old_moat_from_today

<http://www.manchester.gov.uk/selectivelicence>

http://www.manchester.gov.uk/info/10084/private_landlords_information/7399/selective_licensing_renting_out_houses_in_designated_areas/3

http://www.manchester.gov.uk/info/10084/private_landlords_information/7399/selective_licensing_renting_out_houses_in_designated_areas/5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오래 방치된 빈집 5채 집주인 동의 없이 경매

영국 버밍엄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버밍엄市는 주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빈집을 수리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 수준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계획’(Empty Property Strategy)을 시행 중이며 현재 주택법에 근거해 5개의 빈집이 집주인 동의 없이 경매에 올려진 상태
- 배경
 -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 주택부족 현상 발생
 - 중앙정부의 장려정책 ‘뉴 홈 보너스’(New Homes Bonus) 제도
 - 지방정부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보수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 2013년 버밍엄市는 1,500만 파운드(229억 4,190만 원)의 지원금 수혜
 - 시정부는 ‘빈집 활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돕고 장려금도 수급
- 주요 내용
 - 도시 내 빈집을 개보수하여 버밍엄 시의회가 제시한 적합한 주거 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충족하는 집으로 회복시킨 다음 부담 가능한 주택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
 - 주기적으로 도시 내 빈집 현황을 업데이트해 관련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시의회 웹 사이트에 게시
 - 시민들이 쉽게 빈집 정보를 얻고 문의할 수 있음
 -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빈집 문제와 관련된 최신 동향과 조언을 시민에게 제공
 - 빈집 활용계획의 지침
 - 1단계: 주인이 있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빈집 때문에 직간접적 문제가 발생할 때
 - 집주인에게 연락해 빈집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주택 사용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
 - 2단계: 조언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빈집 활용계획 실행에 차질을 줄 때
 -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집행

- 주택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빈집을 처분할 권리 존재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집주인에게 빈집을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회복시킬 의사가 없을 때는 시정부가 강제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시장에 판매할 권한을 가진
- 현재 빈집 5채가 집주인 동의 없이 강제로 주택경매 매물로 올라온 상태
 - 새로운 소유자는 반드시 12개월 안에 해당 주택을 버밍엄 시의회가 제시한 적합한 주거 수준을 준수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함



[그림 1] 빈집 활용계획으로 수선한 빈집의 전후 사진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229/council_seizes_five_empty_properties

https://www.birmingham.gov.uk/download/downloads/id/1637/private_sector_empty_property_strategy_2013-2018.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중저소득자 첫 주택 구매’에 지분공유 방식으로 지원

호주 빅토리아주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빅토리아주는 주택가격의 20%를 차지하는 보증금을 구매자와 정부가 분담하고 주택지분을 공유하는 지분공유(Shared Equity Scheme)방식으로 중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인 ‘빅토리아의 집’(HomesVic) 프로그램을 2018년 2월부터 시작

- 배경

-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력이 더욱 약화
 - 호주에서는 주택구매 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를 보증금으로 예치
 - 그러나 무주택자는 소득의 상당량을 주거 임대료로 지출하기 때문에 20%의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 정부와 구매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지분공유제’로 첫 주택 구매를 지원
 - 구매자가 주택가격의 5%를 보증금으로 내면, 나머지 15%를 정부가 부담
 - 정부는 부담한 비율만큼 주택지분을 소유
- 지분공유제는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먼저 시행(※405호 참조)
 - 호주에서는 사회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행했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처음
- 2017년 시작한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빅토리아인에게 주택을’(Homes for Victoria)의 하나로 시행
 - 이 정책으로 이미 1,200여 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음

- 주요 내용

- 신청 자격은 기준소득 이하의 무주택자
 -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고, 과거에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개인(natural person)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빅토리아에 거주해왔던 사람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 단독세대는 연 소득 7만 5천 호주달러(6,500만 원), 부부나 가족은 9만 5천 호주달러(8천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함

-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5%의 보증금은 본인이 저축한 예금임을 증명해야 함
 -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오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주택구매 노력을 한 신청자를 선별하는 조치
 - 주택가격의 최대치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대출상환금이 본인 소득의 37%를 넘을 수 없음
 - 주택구매자의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를 늘리지 않으려는 조치
 - 주정부는 지원 가능한 주거지역과 주택유형을 지정
 -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3개의 우선 지원지역을 선정
 - 멜버른 도심과 외곽지역의 주거중심지로 고용, 대중교통, 기타 서비스 등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 홈페이지 신청 후 주정부 출자팀(Panel Financier)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시범사업으로 4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
 - 5천만 호주달러(430억 원)의 예산을 배정
 - 매년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새로 심사해 지분비율을 조정
 - 증가한 원금 상환능력에 비례해 수급자의 지분 소유율이 증가
 - 수급자가 주택을 판매하면 정부는 소유한 지분비율만큼 판매 수익을 취하고, 이익금을 새로운 수급자 지원에 사용
- 기대 효과
- 첫 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도 경감
 - 부담능력이 떨어져 주택보유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젊은층의 주택보유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https://www.premier.vic.gov.au/providing-choice-and-affordability-for-first-home-buyers>

<https://www.vic.gov.au/affordablehousing/buying-a-house-in-victoria/homesvic/what-can-i-do-now.html>

<https://www.vic.gov.au/affordablehousing/buying-a-house-in-victoria/homesvic/preferred-locations.html>

<https://www.vic.gov.au/affordablehousing/buying-a-house-in-victoria/homesvic.html>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